

■ 물 관리 업무' 일원화 논란 재燃

수자원 관리의 일원화 문제가 다시 제기돼 수질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와 수량을 관리하는 건설교통부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5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환경부로 물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데 합의했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하천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건교부의 수자원심의관실과 산하 기관인 수자원공사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이 곧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말했다.

현재 물관련 업무중 수량관리는 건교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 5대강 홍수통제소 등이 맡고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수질보전국과 상하수도국, 4대강 환경관리청, 3개 지방환경관리청, 4대강 수질검사소에서 관장해 이원화돼 있다.

환경부는 "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적정수질을 유지할 수 없고 적정수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량은 무가치한 수자원에 불과하다"면서 "수량과 수질은 불가분의 관계로 특히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물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4년 5월 상하수도 관리업무는 건교부에서, 먹는물 관리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으며 현재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에서 물관리 업무를 통합관掌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총괄적인 수자원관리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지난해 8월 범 정부부처적으로 수립된 물관리종합대책은 현행처럼 물관리를 분담토록 결정해 놓았다"며 "물관리의 일원화가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당 차원에서 논의됐

는지는 모르나 정부측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도시, 공단, 주택개발 등 국토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건교부가 이와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물 개발 업무를 다루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마땅한 일"이라며 "환경부의 수질개선은 규제행정이므로 개발과 규제의 균형을 위해서도 현행처럼 분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과거 문민정부 때도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놓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부처간 협의를 벌였으나 무산됐었다.

■ G7 환경연구예산 93억원 낭비

환경부가 선도기술 개발사업(G7)을 추진하면서 과제 중복 선정, 연구비 유용 등으로 93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0월 22일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이 환경부의 국감자료 중 국립환경연구원의 G7관련 연구비 정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92년부터 95년까지 4년간 G7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과제의 중복선정으로 58억3천1백만원, 연구비 유용으로 34억4천만원 등 모두 92억7천1백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증복 과제 선정으로 인한 연구비 낭비사례는 '슬라이드 스트림을 이용한 질소, 인 제거 프로세스 개발' (연구시행자 : 풍림산업, 연구비 25억6천만원), '하수처리장의 영양소 제거공정 개발' (대우건설 기술연구소, 14억6천1백만원), '농어촌형 오폐수 탈질소, 탈인 장치 개발' (과학기술연구원, 9억1천7백만원) 등 5건이 꼽혔다.

연구비 유용사례로는 ▲ 같은 날 해외, 국내 출

장여비 동시 제시 ▲ 연구종료 1주전 해외출장 ▲ 개인 학회비를 연구비로 납부 ▲ 연구종료후 기기 구입비 청구 등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4년간 총 과제 3백13건 중 80%인 2백53건에서 연구비를 31억원이나 반납, 환수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방의원은 “국책연구과제에 앞으로 관련 연구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예정으로 4천3백억원을 투자, 환경기술 선진화를 위한 23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호르몬 9개 물질 국내서 사용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이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으로 분류한 9개 화학물질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계야생보호기금이 환경호르몬으로 분류한 펜타노닐 폐놀류, 비스페놀 A,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시클로헥실프탈레이트(DCHP), 스티렌 다이머, 스티렌 트리머, 디에틸헥실아디프 등 9개 화학물질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계야생보호기금은 농약, 중금속 등 67개 물질을 환경호르몬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물질은 51종이다.

특히 비스페놀 A의 경우 음료수 캔의 내부코팅제나 커튼 방염처리제로 연간 6만1천2백87t이나 사용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가소제(연화제)로 쓰이는 DEHP 사용량은 9만2천9백86t에 이른다.

또 연간 사용량이 DEHP와 함께 플라스틱 가소제로 쓰이는 BBP와 DBP, DCHP, 디에틸헥실아디프는 1천8백32t, 4천4백95t, 1t, 1천3백72t에 각각 이르고 플라스틱 제조원료인 스티렌 다이머와 스티렌 트리머의 사용량도 1만8천8백79t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은 지난 9월부터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중 하나인 비스페놀 A에 대한 분석작업을 시작했으나 국내에서 특정물질을 환경호르몬으로 지정한 것은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대기환경 규제지역 부산·대구 추가

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현재의 서울, 인천, 경기도내 15개시 이외에 12월부터 부산과 대구를 추가 지정해 대기오염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월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과 대구에서 특히 오존을 유발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규제대상은 정유, 화학공장과 저유소, 주유소, 세탁소, 도장시설 등이며 이들업소는 VOC 배출 억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분기별로 대기중 VOC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산, 대구시장은 오존과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삭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투자 등 실천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은 특정지역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80% 초과하는 측정지점이 전체의 30% 이상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된다.

부산은 지난해 시간평균 오존농도가 9개 측정소 모두에서 규제지역 지정기준인 0.08ppm을 초과했고 이산화질소는 9개 측정소 중 4곳에서 지정기준치 0.04ppm을 넘었다.

대구도 지난해 오존농도가 측정소 6곳 모두에서, 이산화질소는 측정소 4곳에서 규제지역 지정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금강 관광수칙 마련

금강산 관광유람선 출범을 앞두고 금강산에서 지켜야 할 관광수칙 10개항이 마련됐다.

이 수칙은 희귀동식물의 보고인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자연보호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기 위해 통일부가 작성중인 교육자료에 포함될 것이라고 환경부 고재윤 자연생태과장이 밝혔다.

금강산 관광수칙은 우선 ▶사진을 찍을 때 야생동물과 30m 이상 떨어지고 ▶가까이 접근해서도 안되며 ▶야생동물과 조류의 먹이가 되는 열매 등을 함부로 따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바위나 나무에 이름을 새기거나 낙서를 하지 말고 ▶나뭇가지를 꺾어 지팡이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큰소리로 '야호' 하는 행위 등을 삼가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희귀식물, 수석 채취 금지 ▶쓰레기 반드시 수거하기 ▶등산로 이탈 금지 ▶인화물질 휴대 금지 등을 명기하고 있다.

금강산에는 북한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금강국수나무와 금강초롱꽃을 비롯한 1천1백45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반달기슴곰, 사향노루, 산양 등 남한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도 살고 있다.

1. 금강 관광수칙과 수도권 오 nhiễm

국민회의 주도로 환경부와 경기, 강원 지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4일 개최된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팔당 상수원 대책안이 대폭 수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다소 수그러들게 됐으나 환경부가 지난 8월 특별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장담한 '2005년까지 수도권에 1급수 맑은 물 공급'이라는 약속은 지켜지기 어렵게 된 가운데 수도권 주민들만 t당 1백원이상의 수도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공산이 커졌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환경부는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 특별대책안의 핵심인 수변구역과 보안림 설정문제에서부터 대폭 후퇴했다.

환경부는 당초 경기도 광주, 양평, 가평, 용인 등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의 한강 양안 1k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식당, 공장, 축사의 신설을 봉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1km 범위내 기준 취락 지역은 제외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해 환경부, 주민 대표, 전문가, 지자체장과 합동조사후 광역단체장과 협의해 수변구역을 지정한다"고 합의해 협의가 안되면 수변구역 설정 자체가 어렵게 됐다.

보안림도 남·북한강 상류 발원지까지 강변 5km를 지정한다는 당초안에서 전체 대상 산림의 19%에 불과한 국·공유림에 대해서만 설정하기로 못박아 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실익이 대폭 줄게 됐다.

오염총량제 역시 2002년 이후 원하는 지자체에 한해 실시하기로 유보했고 임진강유역에 대한 특별대책지역 추가 고시 방침과 팔당댐에서 잠실 수중보까지 한강하류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사실상 백지화했다.

반면 팔당물을 공급받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

권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당초안의 2배인 1당 1백원이상 물게 돼 '1급수의 맑은물' 보장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가구당 매월 2천원씩 추가부담 만 안게 될 공산이 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팔당수계를 전담할 차관급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팔당호 준설도 적극 검토하자는 데는 큰 이견 없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이같은 합의를 도출해냈다"면서 "환경부로서는 잊은 것도 없고 얻은 곳도 없다"고 해명했다.

아황산가스는 96년보다 9.6% 감소했으나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탄화수소는 5.2%, 일산화탄소는 3.7%, 먼지는 3.5%, 질소산화물은 1.6%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60만9천t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기, 전남, 경북, 충남, 서울 순이었다. 서울, 경기는 주로 수송부문, 전남, 경북은 산업부문 배출량이 많고 경남과 충남의 경우 하동, 삼천포, 태안화력발전소의 증설로 발전부문이 배출량 증가세를 주도했다.

차동매연이 대기오염의 50.3% 차지

자동차에서 배출한 가스가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내의 먼지,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4백 36만5천t으로 96년의 4백42만5천t보다 1.4%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난방, 산업, 발전, 수송부문 순으로 배출됐던 대기오염물질량이 90년부터 수송부문 비율이 점차 높아진 가운데 작년엔 전체 배출량의 50.3%에 달했다.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은 차량의 증가로 지난 94년 2백15만2천t(전체의 47.5%), 96년 2백 15만5천t(48.7%)에서 97년 2백19만4천t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가운데 산업부문의 비율은 26.9%, 발전은 17.1%, 난방부문은 5.7%를 차지했다.

오염물질별로 보면 저공해 연료의 보급 확대로

내년에 전국 대기오염지도 만든다

대기환경을 개선하면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토 상공을 2만5천개로 등분한 대기오염 지도가 내년에 처음으로 작성된다.

환경부는 내년 1년간 시·공간적 대기오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2×2km 격자로 나눈 상공의 오염 배출량을 월별, 계절별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월 10일 밝혔다.

전국토 면적 10만여km²를 4km²씩 나눌 경우 2만 5천개의 격자망이 구성된다.

환경부는 전국 대기오염 지도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용역사업에는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영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기상연구소 등이 공동 참여할 예정이다.

환경부 주관으로 이들 연구기관은 우선 인구, 주택현황, 에너지 사용량, 차량통행량과 주행속도, 대기오염도 측정자료 등을 취합한뒤 2만5천 개 격자별로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먼지, 휘발

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해 전국 대기오염 지도를 완성하게 된다.

환경부 김시현 대기보전국장은 “격자별 대기오염 지도는 오염물질 감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는 물론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공장 등 오염원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환경영향 평가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 온실가스 감축 신축성 촉구

최재욱 환경부장관은 지난 11월 12일 “교토(京都)의정서는 지구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있어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고 전제, “현시점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은 ‘신축성체제’의 원칙, 지침 및 규칙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온실가스의 감축과 관련, “한국정부는 신축성 체제의 운영규칙 마련에 빠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체제들이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신뢰성있게 설계되어 환경적인 건전성, 비용 효과성, 형평성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른 당사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신축성체제 가운데 특히 청정개발체제(CDM)는 온실가스 감축부담 의무를 안은 국가의 공약 이행에 효과적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방지하려는 개도국의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정부는 청정개발체제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국이 CDM을 통한 저감실적을 선진

국의 의무이행에 활용하는데 한도를 설정할 경우 청정개발사업 투자와 개도국의 개발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함으로써 선진국의 CDM 실적이행에 한도를 설정하는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최장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에 관해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에 앞서 여기에 적용될 원칙 및 절차, 운용방식이 우선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더 나아가 개도국의 적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과도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장관은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청정개발체제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환경경영 표준화사업’ 추진

산업자원부는 지난 11월 13일 국제기준(ISO 14000)에 부합하는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환경경영 표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산업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앞으로 5년간 36억원이 투입되며 ISO 9000/14000 국내 민간인정기관인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포항제철과 대림산업 등 5개 업체와 아주대 등 3개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의 주 내용은 제품 및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인 전과정평가(LCA) 기법을 한국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제품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관련 정보를 소

비자에게 제공, 제3자에 의해 검증받도록 하는 것이다.

산자부는 이 사업은 국내 기업의 환경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생산활동과 제품개발로 외국제품과의 환경성 비교에서도 우위를 선점, 수출증대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공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모니터 스웨덴 환경규격 획득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2일 스웨덴의 환경규격인 'TCO 99'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TCO 99' 규격은 스웨덴근로자연맹조합(TCO)이 정보기기 제품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양을 규제하는 국제 규격이다.

삼성전자는 이 규격을 획득하기 위해 화면의 밝기 균일도를 30% 이상 개선했으며 유해전자파 차단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달말부터 관련 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예정이다.

현대타쓰나타 독일 환경기준 통과

현대자동차의 EF쏘나타가 독일의 배출가스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의 기준을 충족시켜 독일내 소비자들이 차량 구입시 등록세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6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 '모트(MOT)'지는 최신호에서 EF쏘나타가 유럽연합(EU)이 규정한 배출가스허용 기준인 EUROⅡ보다 훨씬 엄격한 독일 자체 배출가스 기준 중 최고 단계인 D4 등급을 획득

했다고 보도했다.

모트지는 D4 등급을 적용받는 경우 EF쏘나타는 독일현지에서 6백마르크(48만원정도)의 등록세를 감면받게 돼 판매에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이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차량은 EF쏘나타를 비롯해 6기통 BMW 모델, 오토엔진이 장착된 포드의 포커스모델 등 3종류에 불과하다고 이집지는 밝혔다.

한화종합화학, 노분해성 폐수처리 기술 획득

한화종합화학(대표이사 이종학)은 국내 최초로 난분해성 폐수처리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에 착수했다.

한화종합화학은 기존의 플랜트로 처리할 수 없었던 고농도 유기물과 질소함유 폐수를 1~2분내에 99% 이상 분해시킬 수 있는 난분해성 폐수처리기술 개발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11월 11일 밝혔다.

한화종합화학은 지난 10월 29일 남해화학과 플랜트 설치계약을 맺었으며 다른 기업들과도 플랜트 설치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회사는 운전비용이 저렴한데다 소규모 시설로 다량의 폐수처리가 가능하며 2차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획기적인 환경친화 기술의 개발로 연간 5백억원 이상의 수입대체효과가 날 것으로 추정했다.

한화종합화학은 94년 이 기술에 대한 개발을 시작해 지난 9월 과학기술부로부터 '신기술인증' (KT마크)을 획득했다.

